# 비상구 없고 막히고…여전히 위험한 목욕탕들

## 제천 참사에도 안전불감증…광주·전남 3년동안 화재 17건

## 초고층빌딩 잇단 건립 속 23층 이상 화재진압 사다리차 없어

광주일보 취재진이 24일 방문한 광주지역 목욕탕 등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했다. 지난 21일 대형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고 있었고 직원들의 짐을 보관하는 곳도 있었다.

동구의 5층 건물에 자리한 한 사우나는 2층 남탕, 3층 여탕 구조로, 입구 맞은편에 1층으로 통하는 비상구를 두고 있었다. 비상구 표시(가로 20㎝·세로 10㎝)가 눈에 띄는 곳에 설치돼 있고 적재물 등이 없어 비상구 접근은 수월한 편이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간 비상구 계단에는 곳곳에 청소도구나 건축 기자재, 직원들의 짐이 놓여 있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이동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다.

사우나에서 만난 50대 남성은 "제천 화재 소식을 접하고 사우나에 들어올 때 비상구 위치와 대피 경로부터 확인했다"며 "불이 날 경우를 대비해 스프링클러 등 안전 시설 점검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북구의 한 목욕탕은 비상구 없이 출입구가 한 곳 뿐인데도 1층부터 2층 목욕탕까지 계단에 화분이 빼곡히 놓여 있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 밖에 여유가 없었다. 자칫 화재가 발생해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통행에 장애가 되는 화분 때문에 크고 작은 인명피해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

주민 김모씨(여·45)는 "제천 화재사고가 났음에도 이렇게 안일할 수 없다"며 "국민들은 제천 화재로 불안해 하는 데도 아랑곳 않는 업주들의 무관심에 화가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에도 충북 제천에서 화재 피해를 키운 주범으로 지목되는 필로티 구조(기둥으로 건물 1층을 지표면에서 띄운 구조)와 '드라이비트'(스티로폼에 석고나 페인트를 덧바른 마감재) 건축외장재를 쓴 건물들이 많다는 점에서 소방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목욕장(사우나·찜질방) 화재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어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 '2017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와 소방청 국가화재센터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목욕장은 각각 28곳, 67곳이다. 최근 3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 2014년 2건, 2015년 6건, 2016년 4건, 전남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2건 등 매년 목욕장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소방당국이 공동주택·다중이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특별조사에서 광주는 4632곳을 점검해 738곳이, 전남은 9950곳 중 753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불량 판정을 받은 곳 중 광주 27곳, 전남 42곳이 소방기본법 등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광주·전남지역에 우후죽순 격으로 초고층 빌딩이 생겨나고 있으나 화재진압 인프라는 특히 취약하다.

실제 광주에는 30층 이상 고층건물이 26군데(계획 포함)에 달하고 있음에도 광주소방본부는 23층 이상 화재진압용 고가사다리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도시 도로 협소, 안전 문제 등을 들어 올해 사다리차 대신 초고압소방차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7년 2월 수감된 외국인 10명이 사망한 여수출입국관리소 사건, 지난 2014년 환자·간호조무사 등 21명이 사망한 장성요양원 사건 등 대규모 인명피해 화재 사건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한편,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9일까지 38개 스포츠 센터 등에 대한 건물 외벽 가연성 외장제 사용 여부 파악, 소방시설 작동, 비상구·피난통로 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 16년만에 무기징역 단죄

17세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의 범인이 16년 만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뒤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은 2001년 2월 나주시 드들강 유역에서 여고생이 성폭행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시신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발견했지만,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DNA의 주인은 10년이 지난 2012년에서야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른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인 김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김씨는 여고생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2014년 그가 살인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DNA라는 강력한 증거를 두고도 김씨를 무혐의 처분한 수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2015년 시행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무기수 김씨의 교도소를 압수수색해 그의 사건 당일 알리바이 위장용 사진, 수사·재판에 대비해 다른 재소자와 문답 예행연습을 한 흔적 등을 확보했다.

또 여고생의 일기장 등에서 확인한 당시 건강 상태와 사망 당시 모습, 김씨와 만나게 된 인터넷 채팅 사이트 접속 기록 등 자료를 토대로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8월 김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올해 1월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지난 8월 열린 2심도 1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원룸에서 새벽 화재 3층서 떨어진 30대 숨져

### 벽돌 건물…일부만 불타

24일 새벽 광주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났지만신속한 대피가 이뤄져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건물은 제천 복합 스포츠센터와 달리 외장재가 인화성 높은 물질이 아니라 벽돌이어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북부경찰과 북부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15분께 4층 원룸 3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건물 4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건물주 김모(38)씨는 1층까지 내려가며 세입자 20여명을 일일이 깨웠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도 사이렌을 울리며 주민부터 우선 대피시켰다.

이 불로 25㎡ 규모 황모(31)씨의 원룸 내부가 모두 타고 3~4층 복도 일부가 그을렸다. 불은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에 의해 20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시작된 원룸의 세입자 황씨는 화재를 피하던 중 3층 복도 창문으로 떨어져 숨지긴 했지만 입주민들의 신속한 대피와 더불어 불과 연기가 다른 방으로 번지지 않아 큰 화는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발화 지점 등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24일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건물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양소가 있는 제천체육관 내 유가족 대기실 천막에 한 유가족이 고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 제천 스포츠센터 불법증축 건물주 입건 방침

### 356개 스프링클러 모두 작동 안해

대형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목숨을 잃고 36명이 다친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건물주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경찰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6시부터 건물주 이모(53)씨가 입원해 있는 강원도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을 찾아가 4시간가량 대면 조사를 했다. 경찰은 이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이 건물 시설 관리자 2명도 소환 조사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벌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관리자 등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생존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화재 당시 건물 내 356개의 스프링클러가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폐쇄돼 모든 층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많은 희생자(20명)가 난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를 철제 선반으로 막아 놓은 것 역시 명백한 소방법 위반이다.

건물주 이씨에게는 건축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다. 2010년 8월 9일 사용 승인이 난 이 건물은 애초 7층이었으며, 이중 9층 174.9㎡(53)평은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 선거법 위반 김생기 정읍시장 벌금 200만원 확정 직위 상실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같은 당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시장은 이튿날인 14일에도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았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조합비 횡령·리베이트 수수 한전KPS 전 노조간부 실형

조합비를 횡령하고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전KPS 전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안경록 판사는 업무상횡령·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노조위원장 A(59)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313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전 노조 사무처장이자 후임 노조위원장이었던 B(53)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노조위원장과 노조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며 화환이나 기념품 등의 단가를 부풀려 납품계약을 한 뒤 업체로부터 돈을 돌려받거나 출장 인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8차례에 걸쳐 1억1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화분에 걸려 넘어진 취객, 화분·의자 내동댕이 치며 분풀이

쌍나팔

○…만취한 40대가 식당 앞에 놓인 화분 때문에 넘어지자 격분해 화분과 의자를 내동댕이쳐 경찰서행.

○…24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전모(42)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5분께 광주시 남구 김모(46)씨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 있던 50㎝ 크기의 도자기 화분을 길가에 내던지고 나무의자(길이 1m)까지 집어던져 5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는 것.

○…경찰에서 전씨는 "연말을 맞아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중 화분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화가나 실수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 /김한영기자 young@